

‘박원순 수사TF’ 오늘 본격 가동

‘키맨’ 임순영 젠더특보 소환도 임박...“조율중” 서울시청 압수수색 가능성...“수사로 근거 확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규명할 ‘고 박원순 수사TF(태스크포스)’ 회의가 20일 임용환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주재로 열린다.

TF에서는 공식적으로 △서울시청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지 및 목인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사자 명예훼손 등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박 시장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인 사건의 본류인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생활안전부와 수사부 등은 부서별 수사 회의를 열고 다음 날인 20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고 박원순 수사 TF 회의를 준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박 시장 수사와 관련해 17일부터 임용환 차장을 팀장으로, 생활안전부장과 수사부장을 부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TF를 꾸렸다.

또 경찰은 이번 주 중 ‘키맨’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 시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피소 사실 유출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임순영 젠더특보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면서도 “일정을 계속 조율 중이며 현재 시간과 장소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16일에는 고한석 전 비서관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 3명을 연이어 소환 조사했다. 또 시장의 장례 기간 중 유족인 딸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충분한 수사를 통해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주 중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고소인을 지원 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성전화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고 수사 자료를 확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박 시장이 지난 10일 새벽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이후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류품도 분석 중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박 시장의 휴대전화(아이폰XS) 포렌식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잠금 해제하지 못할 경우 경찰청이 보유한 이스트라일 셀러브라이트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포렌식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렌식을 시도했으나 잠금을 푸는 데 약 4개월이 걸렸거나 그 이상으로도 잠금을 해제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바다가 코앞 백사장 주차장 인기 짱 19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백사장과 연결된 주차장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포항 실머리 울회 특구지역 앞에 마련된 백사장 주차장은 약 2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다.

밤중에 발 헛디더 바다로 추락 20대 여성 구조

야간에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바다로 추락한 20대 여성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19일 동해해양경찰서에서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쯤 울릉도 도동 여객선터미널 계류장에서 A씨(28?여)가 산책 중 발을 헛디더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 울릉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순찰팀은 즉시 출동, 철골 구조물을 잡고 버티고 있던 A씨를 구조했다.

구조된 A씨는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선 이날 오전 8시18분쯤 삼척 대진항 앞 해상에서는 연료고갈로 표류중인 레저용 보트가 삼척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은 레저용 보트에 타고 있는 3명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유류를 지원한 뒤 안전하게 입항시켰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양 레포츠 증가에 따라 기관 고장 등으로 표류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출항 전 연료, 배터리 점검은 필수다”고 말했다.

여고서 체육계 미투 “우리도 성추행 당했다”

전남 나주에서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여자 선수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17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운동부 지도자 A씨가 자신이 가르치는 여자 선수들을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학생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A씨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적 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 고등학교생인 이들이 최근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 여수를 찾았다가 A씨의 성추행이 또 반복되자 이에 반발해 훈련지를 이탈한 후 경찰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전남도교육청은 A씨의 성폭력 비위 사실을 교육부와 대한체육회에 통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7월 내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파도 인근 해상서 20대 화물선 선원 실종

경기도 화성 입파도 인근 해상에서 20대 화물선 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15분쯤 화성 입파도 인근 해상을 향해 중이던 3800톤급 화물선(광양 선적·승선원 12명)에서 선원 A씨(29·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A씨가 전날 오전 8시쯤 당직 근무를 마치고 개인 침실에 들어간 이후 A씨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뒤 화물선의 이동 항로를 따라 경비함정,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수색을 진행 중이다.

동료 살해 후 트렁크에 시신 유기 60대 혐의 부인

과거 직장 동료들 흉기로 숨지게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 된 가운데, 이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61)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범행한 증거가 충분한 만큼 구속영장 신청을 통해 A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 등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기도 하지만, 그가 범행 후 이동한 경로, 범행 도구 등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거가 30~40건이나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1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주거지에서 B씨(40대 중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 속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6일 B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23차례 댓글 모욕...벌금 얼마?

포털 댓글 서비스 폐지만으로 한계...인식개선 필요

지난 7월 국내 3대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버를 마지막으로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가 모두 폐지됐다. 네이버 역시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댓글 등록 이력을 전체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악플로 고통을 호소하며 가수 설리가 극단선택한 이후 카카오는 다음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3월에는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했다.

이같이 국내 대형 포털이 악플 근절을 위해 댓글 서비스를 폐지했지만 이에 대한 반대 급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악플러들이 연예인의 SNS와 블로그 등 개인 채

널을 찾아가 악플을 다는 풍선 효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털사이트 댓글 서비스 폐지만으로 혐오, 차별, 비방, 욕설 등 악플을 근절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악플이 악플에만 그치지 않고 특정인을 비방하는 허위사실 글로 이어지고, 교묘하게 짜깁기한 가짜 정보는 특정 유튜브나 오픈이엔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처벌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 많다.

실제로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의 차이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악플은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는다.

일반인 A씨는 지난 2018년 6월 회사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댓글을 받았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특정 게시판에 “판사님 주여는 없습디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XX야” “그냥 아이디처럼 더럽게 사랑 따위 하지 말고 사세요~ㅎㅎ” 등의 욕설이 섞인 댓글을 23차례나 남겼다.

A씨는 B씨를 특정해 소송을 진행했다. 사건 발생부터 판결까지 2년.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씨에게 겨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소송을 통해 유죄를 이끌어냈지만 허탈감이 남은 쪽은 오히려 A씨였다.

구태연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무장은 “명예훼손은 형사처벌되는 범죄 행위인데 이에 대한 양

형기준을 강화하면 범죄 억제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욕설을 넘어 피해자의 신상을 털고 교묘한 짜깁기로 가짜 정보를 퍼뜨려 여론을 선동하는 사례도 문제다.

특히 이를 블로그나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퍼 나르고 재가공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무분별한 모욕과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처벌 조항을 정비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일권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악성 댓글과 편향된 온라인 게시글을 영리에 이용하는 사람과 이를 가져다가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 오픈이엔들이 더 큰 문제”라며 “이들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